

조경태 “서울 편입... 긍정적으로 봐달라”

유정복 인천시장 비판에 반박 “메가시티로 국제도시 발돋움”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쇼라는 비판에 “서울이 세계 5대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국가경쟁력도 오른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경쟁력도 높여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시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서울·부산·광주를 잇는 3축 메가시티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토의 효율성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

이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지방분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도 상충되고, 서울 블랙홀 현상도 심화된다는 비판에 3축 메가시티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3축 메가시티는) 10년 전부터 구상했다”며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지

만 실패했다. 그 이유를 보니 메인인 되는, 핵심이 되는 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안 시키니 수도권으로 편입되고 흡수되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힘의 반대로 추진이 보류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오늘 경남도지사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도 힘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의 ‘서울 메가시티는 곧 국가경쟁력’ 분석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집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막자고 한 것이 메가시티론이다”라며 “서울 말고 전국에 서울 같은 4개 도시를 더 만들자는 게 메가시티론의 핵심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부울경, 대경권, 광주호남권, 충청권에 서울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 발전하고 외곽 중소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질이다”라고 질타했다. **홍정윤 기자**

‘안보 일번지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 도약

인천시의회 ‘안보 결의대회’ 결의문 채택, 태세 강화 다져

인천시의회가 ‘안보 일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9회 제2차 정례회’ 개최일이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결의대회를 열고, 결연한 안보 태세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박용철·장성숙·김명주 의원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선창하며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 조성과 세계평화 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다짐에 임했다.

그동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인천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과 탄도 미사일 개발 행위로 위협받고 있어 한반도

안보 현실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북한과 최접경 지역이자 다수의 국가 주요 핵심 시설을 보유한 ‘안보의 최전선’ 인천에서 300만 시민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 시의원들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과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다시는 서해5도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국가방어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허식 의장은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고 있는 한반도 역시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최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강력한 국가 방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삼삼 기자



인천시의회가 ‘안보 일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윤 대통령 이념 벗으니 지지율 올랐다

1.1% 상승한 36.8% 기록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1.1% 소폭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긍정이 36.8% 부정 60.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 7.0%, 연령

대별로는 60대에서 2.2%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올랐다.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힘은 3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며, 지난주 35.8%에서 11월 1주차는 37.7%라는 결과가 나왔다.

강서구 보궐선거가 치러진 10월 둘째주에 비해 무려 5.7%가 올랐으며 이는 최근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2%로 가장 높게 올랐으며 민주당 강세인 인천·경기에서도 2.2%가 상승했다. 높게 상승한 연령대는 30대와 60대로 각

기 8.4%·4.4%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48%에서 44.8%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이 6.5%, 대구·경북 5.1%, 인천·경기 3.9%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8.2%, 30대에서 5.9%의 지지도가 낮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이념 논쟁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념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반성·국민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상승한 이유를 이념 논쟁이 사라지고 정책으로 이슈를 물고 갔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에 더해 여론도에서는 김포-서울 편입 이슈가 전국을 강타해 흥분도 장군 흥상 이전과 같은 이념 논란을 덮어 버린 것도 한몫했다고 바라봤다.

홍정윤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연일 ‘김포 서울 편입’ 때리기

헌법·국정기조 정면 배치 “치졸한 총선 전략일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광주)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며 10가지 이유를 제

시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김포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한다는 점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게 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국힘의 주장에 대한 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는 헌법 제122조에 위반되며 △주권자의 의견이 없는 반민주적 일방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30조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임종성 위원장은 국힘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 자체가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여당과 김기현 당 대표의 문제점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순간마다 국민의 욕망을 자극만 하지, 해결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김기현 대표는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 전략일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민창 기자**

경기도의회 소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토론

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민주당, 동두천1·사진) 의원은 3일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과 국가기관 등의 능동적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주최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천 과제를 점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박춘배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장은 “경기



도의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원장은 “장애라고 하는 ‘다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장애와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의견과 대안들이 예산 반영 및 실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중소기업 애환 청취

이재영 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영(민주당, 부천3·사진) 의원은 3일 부천 IoT혁신센터에서 부천시 지역 내 중소기업 대표 12명 등과 함께 부천시 중소기업 현장 소통 및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천시 기업 현장간담회(주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부천시의 새로운 소통채널로 부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현장에 참석한 부천의 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매니저



사업이 운영됐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경기도가 불법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불법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통해 중소기업 금리 보조 예산을 증액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는 분들이 많은 만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부천시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9명의 부천 굴지 기업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더했다.

장애학생 효율적 학교 배정 간담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민주당, 파주2·사진) 부위원장은 2일 파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특수교육의 애로사항청취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특수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등 20명이 참석해 파주시 특수학교 관련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 의원은 파주시 특수교육 현황과 관련해 “파주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학급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거리로 2~3시간씩 시간을 소유하며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도의회와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근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정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에 계획된 특수학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복합특수학급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면 특수교육 희망자의 수요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창 기자**

이준석 연일 신당설 띄우기

인요한 “과거에 실패한 길” ‘역지불합쇼’ 혁신위 비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설을 띄우면서 혁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의 대상이 서울에 있다는 당연한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야기를 해봐도 승리는 요원하고 시간만 흘러갈 뿐”이라며 “환자를 외면하고 영통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은 그만하라. 억지 봉합 쇼라도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적이 가려지느냐”고 적었다.

혁신위가 당내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

원권 정치 징계 취소를 1호 안건으로 내놓으며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 전 대표는 혁신 대상은 따로 있다며 냉랭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 창당설’은 날이 갈수록 구체화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2월 말로 시한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다”며 “시한이 줄어들수록 당연히 그쪽(신당 창당)에 가까워 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비명계와 접촉하느냐는 물음에는 “틀린 말하겠나”라며 “12월 말에 어떤 행보를 한다 해도 미리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연합뉴스〉